

[워크숍 5]

[워크숍 5]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정책은 무엇인가

-사회자 오병일: 지금 시간이 되었고 청중이 밖에서도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세션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워크숍이구요.

지금 참석하신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워크숍을 제안해 주신 분인데요. Youth 그룹에 활동하고 있는 김이준 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박경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신: 안녕하세요?

-사회자 오병일: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실장님이신 정미나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정미나 실장님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지금 한 분 더 참석을 기술적인 문제로 약간 못 들어 오고 계신데요, 곧 들어오실 것 같은데 국회입법조사처 신용우 조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래 망중립성 세션이면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통신사잖아요. 그런데 통신사를 저희가 열심히 섭외해 보려고 했는데 참석을 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물론 공공기관에서, 국회에서 참석하시지만 정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도 참석을 고사하셨고요. 그래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공공정책 의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러한 정부가 수집한 그런 자리에서 본인 기관의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는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조금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망중립성 의제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발제는 없고요. 통상의 토론의 방식이 아니라 마치 100분 토론처럼 어떤 특정한 의제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로운 토론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여기 참가자 분들도 Q&A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조사관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은 발제라기보다는 그냥 발제 겸해서 박경신 교수님께서 오픈랩에서 진행하신 웹툰, 제작하신 웹툰이 있다고 합니다. 웹툰을 먼저 보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신: 감사합니다. 우선 인터넷이 다른 통신시장과 어떻게 다른지, 혁명적으로 다르죠.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망중립성이 어떻게 인터넷의 특별한 통신방식과 관련되어 있는지, 관련되어 있다기보다 특별한 통신방식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컴퓨터들 연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참, 참고로 이 웹툰은 아직 저희가 퍼블리싱, 공개를 하지는 않은 건데 오늘 행사에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몇 컷만 보여드릴 것입니다. 스토리는 제가 만들었고 그림은 알파카군 서창

휘 씨, 그리고 육식판다 헤니히 씨 두 분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네트워크가 왼쪽에 중앙집중형이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완전분산형이 있을 수 있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뭐랄까. 개인의 자유, 또 그리고 민주주의에 더 부합할까요. 각 개별 단말이 다른 단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때 더 힘없는 개인도 강력한 정부나 기업 못지않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것은 매우 비싸죠. 왜냐하면 이 위에 중앙집중형으로 하면 중앙에서 받아서 다른 데 연결을 해 주면 컴퓨터 6대 연결하는 데 연결 6번만 하면 되지만 6개를 완전분산형으로 각자 누구의 어떤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과 한꺼번에 소통할 수 있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지금 인터넷과 같은 상황이죠.

이 네트워크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15번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식을 보면 $N(N-1)/2$ 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런데 지금 인터넷처럼 동영상 올린 사람이 누군가 올리면 수억 명이 봐도 되고, 수억 명이 보더라도 동영상 올린 사람은 자기의 동영상을 그 사람들, 1억 명에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N제공, 이렇게 제공에 가까운 연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인터넷입니다.

바로 인터넷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음 제가 서둘러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모든 단말들이 다른 단말들이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보내는 것만 보내려고 하거나 자기가 받으려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사람이 보내려고 하는 것도 주소지를 보고 주소지에 더 가까운 단말에게 전달해 주고 다음 단말은 또 그 주소지를 보고 또 그러니까 도착지죠. 도착 주소지를 보고 도착 주소지에 가까운 또 옆 단말에 전달했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전달해 주겠다는, 각자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모두가 다른 모두에게 다른 모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 이걸 보여드리기 뭐 하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모든 단말들이 바로 옆, 이웃에게만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단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라우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가, 여기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사실 라우터고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는 라우터 근처의 인터넷이 아니라 이터넷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라우터 근처에 이렇게 기생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는.

실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라우터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라우터들이 한 칸씩 패킷에 있는 도착지를 보고 한 칸씩만 서로 전달해 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각자 옆으로만 한 칸씩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서로 배송비를 받기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모두의 커뮤니케이션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상부상조의 정신 하에서 서로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규칙, 이 규칙이 바로 TCP/IP라고 하는데 이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여기 테이블에 동물들이 앉아 있죠. 앉아 있는 알파카한테 와서 팬더가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면 곧바로 전 세계 모두에게 전달하는, 이게 인터넷

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렇게 모든 뭐니까? 모든 라우터들이 옆으로 한 칸 전달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거나, 옆으로 한 칸 전달하면서 비금전적인 조건을 달려고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패킷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면 더 빨리 전달한다거나 또는 패킷 내용이 어떤 내용이면 전달을 안 한다거나 하는 그런 비금전적인 조건, 돈을 주는 것은 금전적인 조건이죠.

이런 게 바로 모두가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인터넷에 접속만 되어 있으면 무료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의 모습이라고, 인터넷의 기본 구조였고 이런 것은 바로 라우터들이 서로 옆으로 한 칸씩 전달하면서 거기에 대해 금전적인 조건이나 비금전적인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망중립성이었다는 것을 만화로 보여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화를 보여드린다기보다도 그냥 망중립성을 제가 이해하는 방식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병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반 전화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런 웹툰이 필요 없었을 텐데 인터넷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중립성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 우선 가장 최근에 핫이슈였던 문제부터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역차별 논란이었잖아요. 즉, 국내의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작은 벤처, 스타트업들은 더 그럴겠죠. 국내 기업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해외 CP들은 거의 요금을 내지 않는데 국내 CP들은 엄청난 요금을 통신사에 내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국내외 CP의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패널 분들께 여쭙보고자 합니다.

대답을 하실 때 본인이 생각하는 또 망사용료는 뭐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나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의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워크숍을 제안해 주신 김이준 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준: 안녕하세요? 이번 워크숍을 제안하게 된 김이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역차별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차별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차별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기로 했어요.

이게 제가 사전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차별은 뭔가 상위에 있는 주체가 다른 주체들을 대함에 있어, 트리트먼트에 있어 차이를 둡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두는 이유가 불합리할 때 저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 국내 망 사업자들이 해외 CP들한테 물리지 않고 국내 사용자한테 망사용료를 물리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국내 망 사업자들이 해외 CP들한테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CP가 국내 CP보다 상위에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차별이라는 말보다는 콘텐츠 파워에서 밀려서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망사용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을 공짜로 까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연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를 받아

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런 초기 설비 이용료,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면 계속 유지도 필요하고 개선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유지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망 사업자나 정부가 되든 간에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수익성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망 사업자들의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 이 세 가지가 망사용료의 구성이라고 봅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자 오병일: 그러니까 차별이라기보다는 콘텐츠 파워가, 파워가 더 세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낼 수는 있다는 개념인 거죠?

-김이준: 맞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그러면 실제 사업자들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 포럼의 정미나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이버나 다음 입장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은지 다른지, 혹은 같다면 어떻게 다르다면 어떻게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코리아 스타트업포럼의 정미나고요.

제가 여기 온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와서 처음 접해 본 이야기가 역차별 이야기가 주로 기존에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살펴보니 역차별이어서 해외 CP들한테 돈을 내게 해라! 라고 갈 게 아니고 그것의 상황은, 그러니까 역차별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해 뿐 보면 국내 CP는 망사용료를 과다하게 내는 측면이 있고 해외 CP는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내야 되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랬을 때 첫 번째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망사용료가 지금 통신사가 국내 CP에게 요구하는 망사용료, 망 이용료의 책정 근거를 조금 더 투명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첫 번째 주장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국감 때도 논쟁이 되었지만 망 이용료가 저희 나라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은 사실 계약상 체감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말씀하셨다시피 해외 CP는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에서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고, 국내 CP는 콘텐츠가 아직 강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신사의 투명한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결국 콘텐츠의 어떤 경쟁력이 담보되어야 통신사도 이후에 수익구조도 발생하는 거고 망도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통신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망에 대한 투자나 통신사로서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제가 약간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러니까 역차별이 실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정미나: 조심스러운데 저희는 후자라고 봅니다. 역차별이라는 표현이 많이 회자 되었는데요. 그렇다기보다 경쟁의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경우에는 망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국내 CP들에게만 가중되는 상황이, 그게 꼭 역차별이 아니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희는 통신사와 정부에게 묻고 있는 거지, 통신사가 해외 CP한테 돈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라! 이런 주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우 조사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사실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고, 입법조사처에서도 많이 제기하셨을 것 같은데, 잘 안 들리시나요? 신용우 조사관님? 아... 예, 그러면 잠깐 마이크가 해결될 때까지, 다시 접속하실 때까지 박경신 교수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조사관님, 박경신 조사관님 이후에 마이크를 다시 넘기겠습니다.

-박경신: 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한국을, 그러니까 전 세계 인터넷을 가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에 SKB, KT, 왼쪽 상단에, 이게 한국 망사업자들이고요. 한국 망 사업자인 코리안 CP라고 되어 있는 회원사들이 KT 데이터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는 CDN, 캐시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연두색 박스가 해외 CP의 서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역차별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려면 우선 망 이용료가 뭐냐를 정의해야 되는데, 아까도 김이준 씨가 정의한 것은 뭐랄까. 접속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망 사용자가 비용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접속료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아까 웹툰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인터넷에서는 모든 라우터들이 정보 전달을 옆으로 한 칸씩 옆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 전달에 대해서는 돈을 받기로 하지 않았고, 결국 그 물리적인 접속을 유지하는 접속료만 이용자에게 받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과 다 연결을 해 주지만 여기에서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접속을 특정 용량으로, 예를 들어서 초당 100mb인지 초당 500mb인지 용량에 따라서 접속료를 받는 거지, 접속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얼마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망 이용료는 우리가 망 이용료를 인터넷에 구동 원리에 부합하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접속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접속료는 예를 들어서 SKB 같은 경우는 접속료를 이용자들한테만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 KT 보면 역시 KT, 이 그림에서는 KT는 보면 지금 코리안 콘텐츠 프로바이더나 캐시서버한테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저기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해외서버와는 접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료를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해외 서버에 있는 콘텐츠를, 오른쪽 연두색 박스에 있는 콘텐츠를 파란 구름, CDN에 옮겨놓고 해외 콘텐츠를 국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역차별이 캐시 서버한테는 지금 접속료를 안 받고 있고 코리안 CP한테는 받고 있는데 역차별이냐, 아니냐. 차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캐시서버가, 예를 들면 KT가 캐시서버에게 파는, 또는 한국 망 사업자들이 캐시서버에 파는 연결성은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용자로부터 파란 구름까지의 이 연결성밖에 안 파는 거고요.

코리안 CP,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KT에 접속할 때는 인터넷 접속을 KT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연결망 전체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언론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

리 집까지 오는 회선에서 많은 트래픽을, 예를 들면 유튜브가 차지하는데, 혹은 페이스북이 차지하는데 왜 네이버나 카카오가 더 많은 부담을 하느냐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박경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의 트래픽이 망 사업자를 통과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비용은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는,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인 것이고.

그리고 캐시 서버를 예를 들어서 KT 데이터센터에 넣었을 때 캐시서버에서 데이터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면 그 캐시서버의 주인한테서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거꾸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AT&T나 버라이즌을 통해서 외국에서 네이버에 접속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네이버를 접속하는 외국인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러면 AT&T나 버라이즌에서 네이버나 카카오에게 망 이용료를 청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캐시서버를 빼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캐시서버를 안 쓰더라도 결국은 그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동네 데이터 라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선택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아니라 넷플릭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넷플릭스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직접 넷플릭스와 접속하고 있지 않은 한국 망 사업자가 또 돈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이 인류에게 약속했던 정보혁명이라는 게 불가능해져버리죠.

-사회자 오병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우 조사관님 말씀 들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한창 논의가 되어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개인적 견해와 함께 국회에서 담론이 어떤지 그런 이야기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우: 그 어떤 단정적으로 어떤 결론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 같아요.

단순히 국회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진영에 있지 않은 분들은 결론적으로 단언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김이준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해외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해외 CP로 콘텐츠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생된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서비스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그러면 해외 직구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배송을 받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실제 해외 CP 같은 경우에도 캐시서버 같은 것을 두지 않으면 안정적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통신사와 해외 CP 간 양 이해관계가 맞아서 일종의 사적 장치의 계약에 따라서 결국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적절히 배분하는 차원에서 국내에 CDN 같은 것을 두고 가격협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통신관계사는 아니라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요. 그러면 그 자체가 결국에는 내부적인 계약적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콘텐츠 CP들, 국내, 해외 CP들 간에 표면적으로 보면 결국 경쟁력의 차이, 출발점이 오히려 국내 CP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인해서 출발점이 달라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는 결국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CP를 많이 이용해서 이런 논란이 많이 없어지고 분산되는 게 좋겠지만 그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망사용료 입장에서는 그것도 양 견해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딱히 접속료만을 둘 것이냐, 아니면 캐시서버 설치비용까지 둘 것이냐, 잘라서 말하기에는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상황에서 그러면 CP의... 그리고 아까 정미나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실제 이용료가 국내나 해외든 적정하냐 여부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 통신비, 결국은 요금제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원가가 얼마냐. 그리고 실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적정하냐의 문제도 통계가 다르거든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정 의무화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민주 국가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떤 지금도 망중립성 연구반 같은 게 운영되고 있지만 연구반이나 위원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곳에서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정한 이용료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가고, 그다음에 해외와 국내 간 차별 문제는 인식을, 차별이라기보다 현재의 현상을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방안, 꼭 이용료의 강제라기보다도 이를테면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 중에 사업법에서 부가통신 사업법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시행 예정이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법 제도적인 도구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다시 신용우 조사관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조금 전 박경신 교수님은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해외 CP들은 캐시서버를 두는 거고 국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통신사의 서비스를 받는 것은 전체 인터넷에 대한 접속비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을 동의하더라도 캐시서버 비용을 내고 있지만 이게 해외 사업자의 권한이, 권력이 파워가 더 국내 통신사보다 세기 때문에 적정하게 내야 될 수준보다 훨씬 더 적게 내고 있다.

말하면 서비스는 다르더라도 국내 CP들은 훨씬 더 많은 접속료를 내고 있는 반면에 해외 CP들은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적게 내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신용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는 양쪽에 말씀하신 두 가지 중 어느 쪽인지 명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박경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단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용료 입장에서 국내 대형 CP와 통신사 간의 관계에서 이 접속료가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의 이슈도 있고. 플러스 협상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재미있는 사례는 오렌지 협상을 할 때 프랑스는 프랑스 자체의 인구도 있지만 불어를 사용하는 방송 콘텐츠가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까지 가는 그 부분이 이 뒷단에 상당한 많은 시청자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협상력의 이야기도 나와서 결국 협상력의 문제도 고려해서 이런 방향을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오병일: 제가 질문을 던지... 지금까지 질문을 던지고 추가 질문도 던졌는데요. 혹

시 다른 패널 의견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거나 다른 반론을 제기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다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짧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온 주제에 대해서 더 추가 발언 해 주실 분 계실까요?

예. 그러면 다음 연관되지만... 네? 연관되지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지금 조금 전 신용우 조사관님도 접속료 문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문제까지 일단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다음 주제로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과연 국내 통신망의 접속료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아니면 알 수 없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이준 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이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를 해 본 결론은 국내 접속료가 9달러/bmps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접속료를 어떤 방식으로 책정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리서치를 못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럽이나 미국 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하고 아시아 지역에 비해 상당히 비싼데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아 제가 말을 잘못 하고 있네요.

아시아보다는 싸지만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상당히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 지역의 인터넷 사용료를 대충 조사해 봤는데 지금 링크를 하나 드릴 수 있겠지만 주로 높은 국가들이 미얀마라든가 라오스, 필리핀 이런 인터넷망 자체가 열악한 국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정말로 인터넷 보급 자체가 어려워서 사용료가 높을 거라고 이해해서 아시아 같은 곳을 끌어들어서 국내 망사용료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접속료... 한 번만 질문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회자 오병일: 그러니까 국내 접속료가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김이준: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SK나 국내 ISP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용자 입장으로 제가 매달 통신요금, 그리고 저희 집도 인터넷 요금을 매달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 국내 망 사업자들이 핸드폰, 단말기를 바꿀 때 단말기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뿌리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TV 등을 이용할 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망 사업자들이 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충분한 수익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도 펼칠 수 있다. 한마디로 다소 비싼 요금을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부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그러면 다음 마이크는 정미나 실장님께 넘기고 싶은데, 아까도 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CP 입장에서 더 싸면 좋죠. 당연히 더 싸면 좋는데 국내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국내 CP들에게 통신 사업자가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혹시 있나요?

-정미나: 지난 국감 때 저희 CP들한테 그런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오셨어요. 역차별, 특히

국회에서 역차별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희가 그런데 계약상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의 계약조건을 당연히 공개하는 게 저희로서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자꾸 투명성 조항을 이야기하는 게 정부가 가격의 변화나 추이를 완전 사적 기업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추이를 정부가 볼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을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깔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 조항상.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코스포 차원에서는 그래서 조금 글로벌리 계약을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알아본 바는 있어요. 그랬을 때 평균치로 엄청 많은 표본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6배가량? 대체로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비싸다.

소비자 요금은 오히려 저렴한 측면이 있겠지만 B2B 측면에서 오히려 CP들이 내는 요금은 상당히 비싼 것은 저희가 기정사실로 이미 체감하고 있는 바고.

사실 지금 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문제 인증료나 070번호나 등등, 인앱 수수료 관련해서도 일부 선택제라든지 등등 해서 통신사가 사부작사부작 가지고 가는 게 많아요,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명될 필요가 있고.

특히 통신사가 저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협상력도 저희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선을 해보려고 작년에 다 아시겠지만 특히 상호접속고시를 일부 무정산 구간으로 바꾸면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기는 했는데요. 그것 역시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을지는 지금 지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스타트업들은 대체로 아마존, 클라우드를 aws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미 통신료가 aws 통신사와 계약한 거기에 가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개별사 입장에서는 뭔가 많이 내고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통신사에게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사회자 오병일: 조금 전 투명성 조항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어떻게 파악을 하죠? 지금 사적인 계약을 공개하기에는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CP들한테도 정보를 얻을 수 없고 통신사로부터도 통신사와 같이 하는 계약일 테니까 거기에서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정미나: 투명성 조항 같은 경우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이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담을 수도 있는 건데, 최근에 유럽에서는 망중립성 개정을 하면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보고라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이라든지 프랑스처럼 갈 수 있는 부분도 하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통신사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망이용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가격 제안을 할 수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또 하나는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지. 지금 사실상 원리적으로 보면 내려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기부가 일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투명성이라는 것이 망의 퀄리티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들, 그다음에 트래픽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가격도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정미나: 투명성 조항이 바로 가격에 대한 공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일부 산정 근거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오병일: 지금 대화 내용까지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박경신 교수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신: 이게 전 세계 망 사업자들이 다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텔레지오그래피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2017년도 3-4분기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트랜짓 프라이스라는 게 트랜짓이 바로 인터넷 접속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소비자고 B2B고 다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도시 지금 인터넷 접속료 비교를 한 거고요.

한 달, 월 한 달 비용입니다.

1mbps. 초당 1mb 속도의 접속료가 서울이 3.77, 파리가 45쵸. 파리보다 8.3배 비싼 거고 런던보다 6.2배, 뉴욕보다 4.8배, 싱가포르, 도쿄보다 1.7배, 2배가량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료는 한국이 소비자고 B2B고 다 포함해 봤을 때 아마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싸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망 이용료는 접속료로 이해했을 때만 인터넷의 기본 구동 원리와 부합하게 됩니다.

아까 신용우 조사관님은 외국 콘텐츠가 더 많이 망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데이터가 미디어, 데이터가 미디어를 지나가는 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공중파 TV 보면 HD로 TV 보잖아요. HD 화질로 TV 보시잖아요.

그러면 HD로 그렇게 선명한 화질의 데이터가 지금 TV까지 오는데 여러분 TV 많이 본다요 돈 더 내시나요? 안 내죠. 케이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 TV 얼마나 오래 보시든지 관계없이 정액만 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리선을 통해서 지나가든 광선을 통해서 지나가든 또는 공기 중을 통해서 지나가든 전자기파가 미디어를 통해서 지나가는 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는 상황에서 없는 상황 플러스 모든 라우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 전달을, 예를 들어서 한국 망 사업자가 미국 유튜브 서버에서부터 데이터를 끌어와서 여기 한국 이용자한테 전달해 준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30개, 40개 넘는 라우터를 거쳐야만 결국에 전달을 해 주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한국에서 다음 웹 사이트에 한 번 접속하는 것도 라우터 16개, 18개는 거쳐야 여러분 서울에서 접속하시더라도 라우터를 그렇게 많이 거쳐야 되는데 그 라우터가 어느 망 사업자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중소 망 사업자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각자 한 칸씩만 옆으로 전달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즉, 데이터가 선을 지나가는 데 드는 비용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 전달해 주는 과 정도 한 업체가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상부상조하는 방식으로 다 쪼개서 한 칸씩만 도착지로 미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망 이용료는, 그러니까 정보 전달료로서의 망 이용료는 받지 않도록 하자는 합의 하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속료가 지금 산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파리의 8배나 될 정도로 비싸냐 하면 한국은 발신자 종량제를 2016년부터 시행해서 그렇습니다. 발신자 종량제라는 것은 바로 전화처럼 얼마나 많은, 얼마나

전화를 오래 했느냐. 얼마나 여러 번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선을 지나갔냐에 따라서 다 돈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선을 지나갈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물리적인 지식과 상충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신자종량제가 왜 인터넷 접속료를 높이는지 조금 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결국 한국 정부의 어떤 이런 발신자 종량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인터넷 접속료가 유지되고 있고.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한국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한국 CP들의 영업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지금 외국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은, 외국 콘텐츠 제공자들은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망 사업자와 직접 접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널 접속료가 없습니다. 낸다면 캐시서버 접속료는 내는 것인데 캐시서버 접속료는 사실 한국망 사업자가, 한국망 사업자는 전 세계 이용자한테 인터넷을 판다고 할 때는 전 세계 컴퓨터의 접속 가능성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료를 가정이나 기업한테 받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보다 상위 망 사업자에게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면 발생하는 해외 접속료를 한국 망 사업자가 상위 망 사업자에게 내야 되는 해외 접속료를 아끼기 위해서 캐시서버를 설치해 부탁해서, 외국 회사들한테 부탁해서 캐시서버를 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캐시서버에 대한 접속료를 받을 수 있는 협상력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외국 콘텐츠들은 한국에서 무료로 한국에 다 제공이 되고 한국 콘텐츠는 이렇게 전 세계, 그러니까 파리 8배나 되는 높은 접속료를 콘텐츠 제공자가 내고 있어야만 한국 콘텐츠들이 한국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그냥 숫자로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콘텐츠 제공자들의 어떤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그 상호접속 문제는 이따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이 질의와 관련해서 지금 정미나 실장님도 투명성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공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거니까, 하시는 공간이니까 이런 투명성 요구를 포함해서 이런, 그러니까 망 이용 대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용우 조사관님.

-신용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누구도 수궁할 만한 결론을 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도 정미나 실장님 말씀 주셨지만 여기에는 자료 공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테고, 이게 완전히 다 공개해서 영업비밀 또는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좋은 말씀 주신 것은 어떤 추세라도 알 수 있게 기본적인 자료만 공개되거나 제한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논의가 이제 평행선을 긋지 않고 조금씩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 이게 사업법이나 이런 법에 자료공개 의무를 둔다고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게 어느 자료까지 될 수 있는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더 이상 평행선을 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제 출발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한 가지 안

으로, 이 이용료 해결을 위해 한 가지 안으로 자료수집 권한이나 그런 것을 두자는 내용이 권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신: 투명성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사례 계속 말씀하셨고 프랑스 알셉에서 이제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나 과기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알셉에서는 망 이용료 가격까지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

왜냐하면 이것을 전부 다 수집하고 있지 않으면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다음 토론에서 나올 문제인데 실제로 돈을 더 내는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데이터를 더 빨리 이동시키거나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접속료가 정보 전달료로, 그러니까 접속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정보 전달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되면 망중립성이 깨져 버리거든요.

인터넷 구동 원리가 깨져버립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가격까지 전부 다 받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업자들이 공개하기에는 참 어렵죠.

특히 협상력이 별로 없는 콘텐츠 프로바이더 쪽에서는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러니까 망 사업자들한테 부탁부탁해서 깎고 깎아서 접속료 계약을 할 때는 망 사업자는 이제 당신들한테는 주는 가격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주는데 그것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알리게 되면 지금 힘들게 깎아서 얻은 그 가격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투명성이 대중에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사하는 한 기관이 거기에서만 모으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되는, 그리고 시행할 수 있는, 프랑스 알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조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자 오병일: 그러면 다음 의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상호접속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페이스북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패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둘러싼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게 우리나라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된 거였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 상호접속고시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혹시 한번 돌아가면서 의견을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이준 님부터 발언해 주세요.

-김이준: 네. 상호접속고시에 대해서 상호접속고시라는 원리가 통신이라는 게 네이버가 SKT의 인터넷을 사용하면 네이버의 트래픽이 SKT로 가게 되고 그게 연결되어서 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네이버가 SKT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이 맞는 것이죠, 일단.

그런데 저는 이 상호접속고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망사용료가 책정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제가 네이버 망사용료라는 것을 검색해 봤을 때 나온 것은 그 세를 기준으로 네이버가 하는 700억, 1100억 이런 식으로 망사용료를 물고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20% 정도를 망사용료로 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판단한 것은 무엇이나 하면 사실 이 CP들의 수익 구조는 아무리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도 전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포털엔진

도 쓰고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포털엔진, 지도, 쇼핑 등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발을 들이고 있어서 수익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동영상 콘텐츠로 진행하지만 동영상의 트래픽 양에 비해서 수익성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쓰는 별풍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저는 이것의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CP의 사업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적으로 데이터 용량에 비례해서만 가격을 측정하고 있다는 현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세션을 발의한 것도 그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성한 원문은 이 CP들의 사업 성과, 그러니까 매출을 바탕으로 그에 비례하여 어느 정도의 망사용료를 측정할 수 있는 개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이게 망중립성 이슈나 그런 것에 굉장히 반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뾰족한 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상호접속고시의 문제점은 CP들의 사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접속 용량에만 비례해서만 가격을 측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호접속을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일단 KT와 SKT도 서로 접속을 하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 트래픽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비용을 서로 안 낼 건지, 누가 어디에서 낼 것인지 해서 현재는 트래픽이 많이 가는 발신하는 쪽에서 내는 것으로 바꿨더니 그러면 콘텐츠 사업자들을 더 안 받으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여기 패널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호접속고시에 대해서 이것도 많이 변화되어 왔고.

그런데 정부가 상호접속고시를 만든 취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통신사업자들끼리 협상해서 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협상력이 강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취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호접속고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지, 일단 정미나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나: 일단 상호접속고시가 원래 만들어진 배경은 저희 CP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통신사 간의 경쟁을 권고하고 이려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일정 부분 결국 망 이용료의 상승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다들 공유를 했고.

그래서 지난 작년에 일부 무정산 구간을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잠재워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상황을 시장에서 파악 중인데요.

그런데 아까 박경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발신자 중심의 이 부분은 약간 넉센스인 부분인데, 사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지금 무정산 구간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바는 그래도 지켜보되 발신자 부분을 빨리 조속히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그런데 그 이전에는 발신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어떤 부분은 무정

산, 어떤 부분은 누가 어떤 트래픽당 얼마를 내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옳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미나: 글썩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안 해 봤는데, (웃음) 아까 김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B2B 계약의 당사자로서 망 이용에 대한 부분 가격이 매겨지고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일종의 고객인 거지, 그 외 저희의 BM, CP들이 어떤 다양한 BM을 가지느냐가 망 이용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트래픽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별개로 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접속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맞고. 단, 거기에 대한 산정에 상호접속고시가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지금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박경신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박경신: 상호접속고시와 발신자 종량제와 구분해야 되는데, 상호접속고시는 발신자 종량제가 2016년도 시행되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상호접속고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지배력이 있는 망 사업자가 다른 망 사업자들에게 어떤 독점 이윤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접속료를 받음에 있어서, 또는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접속료를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이용자에게 접속료만, 물론 상호접속고시는 이용자 관계나 콘텐츠 제공자 관계는 다루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 다른 망사업자, 특히 중소망사업자 관계에 독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상호접속고시고.

발신자 종량제는 2016년부터 시행이 된 거고 발신자 종량제는 정미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폐지되어야 되고요.

무정산 구간을 1.8:1로 설정했다고 하는데 1.8:1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AT&T나 미국 망 사업자끼리 피어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무정산을 망 사업자들이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1.8:1 이상 보내는 트래픽과 받는 트래픽의 불균형이 있으면 그러면 피어링 안 한다, 여기에서 이제 따오신 것 같은데.

그 미국 상황과 또는 외국 상황과 지금 한국 상황이 가장 차이는 뭐냐 하면 외국 상황은 그렇게 해서 1.8:1이 넘으면 무정산을 안 하고 정산을 하지만 정산을 하는 게 종량제로 정산하는 게 아니라 용량으로 정산을 하거든요. 아까 신용우 조사관님이 프랑스 오렌지 사례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오렌지 때 구글 캐시서버를 프랑스의 오렌지 텔레콤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뭐니까? 접속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접속료는 용량에 비례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지, 종량제 법칙,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망 이용료, 데이터 전달료 개념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정산 구간을 1.8:1로 정산해 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

이 상황에서도 계속 망 사업자들은 킬러콘텐츠들을 호스트 할, 인기 있는 콘텐츠를 호스트 할 동기를 계속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계속 접속료를 높여도 관찮다는 거죠, 망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센티브의 변경을 두지는 않기 때문에 무정산 구간 설정한 것은 현재 문제를 설정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기부가 이거 발표하면서 1.8:1이면 지금의 어떤 트래픽 불균형은 거의 커버가 된다. 정산할 게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현재 발신자 종량제를 했기 때문에 서로 트래픽을 발생 안 시키려고 무척 노력하거든요, 트래픽 불균형

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척 노력했기 때문에 1.8:1 미만으로 유지가 된 거지.

지금 그것을 가지고 1.8:1이면 정산할 게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콘텐츠가, 국내 콘텐츠가 국내 시장에서 인기 있는 상황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고 지금 상황을 고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이준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서 너무 위험한 말씀이셔서 제가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사업 구조를 보고 가격을 따로 매기라는 것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 쟈트리피케이션이라고 알죠?

어디 흥대면 흥대, 여기 어떤 상인이 들어와서 점포를 꾸며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빌딩 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높여서 결국에는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점포만 들어오고 거기 있던 토착 상점들은 다 쫓겨나고, 이게 쟈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업 구조나 어떻게 이윤을 내는지 그것까지 망 사업자가 그것 비례해서 돈을 받아 가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작은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한 번 히트치는 킬러 콘텐츠 만들었다가 거기에 맞춰서 접속료를 내게 되면 곧바로 그 회사는 망하거나 아니면 접속료가 싼 외국으로 가서 서비스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전기,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물을 받아서 그 물로 코카콜라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 남겼다고 해서 코카콜라 회사에는 수도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냐, 이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결국 사람들의 창의력과 사업가 정신을 통해서, 또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글을 하나 써도 민주주의에 관한 글을 하나 써서 또는 영상을 올려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데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그 서버를 호스트 하는 업자한테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런 글을 호스트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인터넷이 지향했던 생태계는 그런 창의력이 자유롭게 뿜힐 수 있는, 수백만 명 사람에게 자기 메시지를 전달해도 전달료는 말한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세상을 지향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제가 아까 박경신 교수님께 하나 확실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호 접속고시를 이야기한 것은 이 변경된 상호접속고시가 이제 종량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이 상호접속고시를 없앤 거냐, 아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없애는 거냐. 아니면 그 이전의 상호접속고시로 되돌아가는 거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린 거거든요.

박경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경신: 우선 발신자 종량제를 강제하는 것은 우선 없애야 되고, 이게 가장 큰 전 세계에 없는 제도입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상호접속을 규제하는 것도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모든 상호접속이라는 것은 모든 망 사업자와 컴퓨터는 접속하면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서로 접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지 않아도 뭐랄까?

어떤 시장 지배력을 발휘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 상호접속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한 사업자가 종량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뭐냐 하면 종량제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선,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종량제는 종

량제를 강제하는 조항은 빨리 없애야 되고요.

그러면 2016년 이전으로 우선 돌아가야 될 테고, 그러면 2016년 이전에 그러면 상호접속고시는 그대로 두는 게 좋으냐.

우선 종량제를 없애고 나면 그렇게 해서 거품을 걷어낸 다음에 상호접속 어떤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후규제, 사전규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발신자 종량제가 사전규제를 둔 거거든요. 그러면 상호접속고시를 사후규제 방식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알셈이 하는 방식으로.

경쟁법을 도입해서 실제 시장지배력 남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에는 인터넷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종립적인 인터넷 익스체인지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지, 어떤 사업자들이 IX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지. 또는 들어오지 않도록,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지를 조사하면서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회자 오병일: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신용우 조사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용우: 어려운 문제고 이 상호접속고시 개정과 또 말씀하신 발신자 종량제로 인해서 CP들에게 얼마큼 망 이용료 상승을 가지고 왔는지는 의견이 분분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량제 자체가 약간 오병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견해 중에 대형 CP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없앤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조금 달라지는 점을 생각해 보면 기존에 그냥 텍스트 기반의 서비스만 있을 때는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었는데 지금 굉장히 대용량의 비디오, 동영상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반응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의문이 있고.

아까 박경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적으로 어떤, 사전적인 규제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쟁법적인 차원에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이게 그 통신사 뿐만 아니라 여러 둘러싼 대형 CP 같은 전반적인 경쟁 상황을 보고서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이제 한 14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참관을 하고 계신 분들도 Q&A를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패널 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30분까지는 꼭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내지 14분 정도 이게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은 망중립성 논의로 다시 돌아가서 5G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조금 더 미세하게는 5G 하에서 관리형 서비스, 예를 들면 자율주행자동차나 원격의료 등 새로운 5G 환경의 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지정해서 이것들을 예외로 해야 된다, 망중립성 적용의 예외로 해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 적용을 하고 있고 배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 과연 관리형 서비스 도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이준 님부터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준: 저는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나 원격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형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생긴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나온다면 저는 망중립성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미나 실장님.

-정미나: 네, 아니, 속도가 빨라지고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관리형 서비스나 이른바 특수 서비스가 당연히 생겨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을 뭐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5G 자체는 무조건 망중립성 예외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고 그 기술이 어떠한지에 대해 특수한 망중립성 예외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반형, 최선형 서비스 인터넷 망으로 제공할 수 없는 정도의 서비스, 정말 특수하게 특수한 속도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출연했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최선형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망중립성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특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로 가는 방향이 글로벌하게 맞는 방향인 것 같고.

문제를 그 경우에도 지금 최선형 인터넷에서의 투명성 이야기도 있지만 특히 특수서비스나 관리형 서비스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뭔가 제대로 정해진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 중심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하고 투명화 조항을 강화시켜서 그 역시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가령 돈이 없으면 절대 특수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박경신 교수님.

-박경신: 관리형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생명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사실 홍보수단이고요.

5G와 관리형 서비스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4G 상태에서 관리형 서비스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망 사업자들이 제공할겠다는 관리형 서비스가 지금 자율주행이나 원격의료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막 나오는 제품들은 공장 안에서 로봇들 이동시키는, 작동시키는 이런 것들 5G 서비스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G 서비스 그러한 특별 서비스를 둔다는 것은 망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망 파이프는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안에 파이프를 하나 또 뒀서 그 파이프를 지나가는 데이터들 속도는 빠르게 하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서로 경쟁해서 혼잡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정말 인간 생명에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은 빨리 유통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천천히 지나가게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과연 어떤 데이터가 인간 생명에 더 소중한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앱을 통하는 트래픽은 다 인간생명에 중요하고, 병원을 통하는 데이터나 이런 것은 무조건 인간생명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수술, 원격수술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성형수술이었다거나 또는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자율주행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난감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였다, 그런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세월호 사태를 보면 정말 중요한 인터넷 서비스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태 터졌을 때 실제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상황을 서로 알려주고 이랬던 게 뭐였나요? 카카오톡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재난이 나더라도 실제 사람들이 어디가 위험 지역이고 어디에 가면 구호물자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정보는 우리가 평소 쓰는 앱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거지, 특별히 이 앱을 통하는 데이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 앱 데이터는 특별히 관리해야 돼! 이것은 관리형 서비스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 생명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되는 앱, 그 앱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정보, 또 남을 구해주는 정보를 조금씩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관리형 서비스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리형 서비스를 만든다면 이런 일반 인터넷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미 유럽의 관리형 서비스 제공 요건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인터넷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요건이 지금 없습니다. 관리형 서비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하루 빨리 개정이 되고 즉, 지금 더 강화되어야 되죠.

강화된 후에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일반 인터넷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게 유럽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일반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정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로 적정수준을 객관적으로 정해줄 수 있고 그것만 유지되면 관리형 서비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혀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제가 사실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박경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조항이 있기는 한데 아마 이것을 조금 더 정규화 시키는 논의를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우 조사관님 의견 듣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G나 네트워크 슬라이싱 쪽, 관리형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저는 망중립성이 원칙이 이게 계속 이주 되냐, 아니냐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생각 돼요. 돼요. 그러니까 망중립성.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라 인터넷상한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알 것이냐.

정미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형 서비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박경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테면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에서 이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 5G 특징 중 하나가 초저지연이 있는데 노 레이더 시점. 한 몇 m 세컨드 이하로 이 네트워크가 보장되어야지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요건이 되면 거기에 맞춘 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트래픽에 대해서는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은 물론 5G가 조금 더 깔리고 서비스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정통부에서 사업법에서 2개가 발의가 되었는데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트래픽, 망중립성 원칙은 성립하고 예외적인 트래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했고, 또 하나는 합리적 트래픽 품질 보장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을 했는데 결국 유사한 같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어떤 서비스 어느 정도로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 오병일: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답변이 되었다고 했네요. (웃음)

CP의 망 품질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망비용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시 이것은 대답해 주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짧게 1분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신 교수님.

-박경신: 제가 이거 Q&A 기능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답을 썼다가, 죄송합니다.

답 읽어드리겠습니다.

망비용이 회사나 가정이 내는 접속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접속료를 더 높이는 쪽으로 귀결될 거라 봅니다.

처음에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에게만 부과가 되겠지만 콘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그 의무의 규모가 결국 지금 종량제로, 그러니까 망 품질 의무법만 있는 게 아니라 종량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망 품질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망 품질을 보장하는 의무도 결국에 그 의무의 비용이, 의무를 충족시키는 비용이 결국 종량제로 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무와 조금 다릅니다.

이용자들에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회사나 개인이든 접속료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킬러 콘텐츠를 올리는 이용자에게는 유료화를 한다거나 해서 이용자들에게 부과를 의무를 전가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사회자 오병일: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 비슷한 견해신가요?

-정미나: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 국내 CP들 입장에서는 사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경쟁이 워낙 심해서. 그래서 저희는 막다른 골목에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망품질 유지 의무라는 게 결국 개정 과정에서 서비스로 바뀌었거든요, 논의 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망 품질을 유지하는 의무는 통신사도 있는 거죠.

그것을 CP한테 전가해서는 안 되고 그게 법안 개정 과정에서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요.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통신사는 통신사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정부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오병일: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저는 보통 토론회에서 발제 한 30분 하시고 토론자 자기 시간 떴으면 자유토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궁금한, 정말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서 저한테는 되

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워크숍을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망중립성 워크숍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